



#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격차원인과 시사점

최장훈 연구위원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들의 경우와는 달리, 전체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음. OECD 국가들을 살펴보면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전체가구와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음. 그 이유는 OECD 선진국들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적용비율이 높아 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이 전체가구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임. 반면,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넓고 노후 일자리도 열악하여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월등히 높음.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므로 노인가구의 빈곤율 해소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후의 일자리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들의 경우와는 달리, 전체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3.8%로 OECD 평균 11.5%와 큰 차이가 없으나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45.7%로 OECD 평균 12.5%보다 훨씬 높음<sup>5)</sup>
- 한국의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전체가구 빈곤율의 3.3배 수준이며, 가처분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절대 빈곤율도 2016년 32.6%로 전체가구(9.3%)에 비해 노인가구가 더 높음<sup>6)</sup>

## ■ OECD 국가들을 살펴보면,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가구의 상대적 빈곤율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음(표 1) 참조

- 일본, 영국, 미국 등의 국가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전체가구의 빈곤율보다 높지만 그 격차는 크지 않음
- 캐나다와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는 전체가구의 빈곤율보다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오히려 낮음
- OECD 평균으로 보면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12.5%로 전체가구의 빈곤율인 11.5%와 큰 차이가 없음

5) Pensions at a Glance 2017(OECD)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빈곤통계연보」

〈표 1〉 OECD 주요국의 노인가구 빈곤율과 전체가구 빈곤율

(단위: %)

구분	노인가구	전체가구	구분	노인가구	전체가구
호주	25.7	12.8	이태리	9.3	13.7
오스트리아	8.8	9.0	일본	19.0	16.1
벨기에	7.7	9.1	<b>한국</b>	<b>45.7</b>	<b>13.8</b>
캐나다	9.0	12.6	멕시코	25.6	16.7
체코	3.7	5.9	네덜란드	3.7	7.9
덴마크	3.2	5.5	스페인	5.4	15.3
핀란드	5.2	6.3	영국	13.8	10.9
프랑스	3.6	8.2	미국	20.9	16.8
독일	9.5	9.5	<b>OECD 평균</b>	<b>12.5</b>	<b>11.5</b>

주: 노인가구는 66세 이상 가구주의 가구로 2014년 기준임. 단, 일본은 2012년, 한국, 영국, 미국은 2015년 기준임  
 자료: Pensions at a Glance 2017(OECD)

■ OECD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낮은 이유는 공적이전소득을 적용받는 비율이 높아 소득수준이 전체가구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표 2〉 참조)

- OECD 평균으로 보면, 노인가구 소득원의 66% 이상이 공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됨
- 이에 따라 OECD 평균 노인가구의 소득은 전체가구 소득의 88%에 달함

■ 반면,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넓고 노후의 일자리도 열악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노인가구의 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30.2%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음
  - 국민연금제도가 시행(1988년)된 이후의 기간이 길지 않아 현재 노인의 상당수는 국민연금급여를 받을 수 없고 받더라도 급여액이 적은 상태임
  - 하지만,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자는 2016년 기준으로 55%(국민연금 50%, 지역연금 5%)로, 45%는 노후에도 여전히 국민연금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것임<sup>7)</sup>
- 우리나라는 노인가구의 소득 중 근로/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임(〈표 2〉 참조)
  - OECD 국가들 중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인 국가는 전체 35개국 중 2개국(한국, 멕시코)에 불과함
  - 노후의 근로/사업소득이 높은 이유는 공적이전소득이 낮아 노후에도 일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임
- 하지만, 노후소득을 위한 일자리는 임시직과 일용직 등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이라는 특징을 보임
  -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의 종사 직종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40.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2.9%,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7.5%, 판매종사자 5.6% 등의 순서임<sup>8)</sup>

7) 국회예산정책처(2017),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안전망 정책 분석 II[노후소득보장대책 분석]」  
 8) 정경화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리나라 노인가구소득은 전체가구소득의 69%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임<sup>9)</sup>

〈표 2〉 OECD 주요국의 전체가구 소득 대비 노인가구(66세 이상)소득 비율 및 노인가구의 소득구성

(단위: %)

구분	전체가구소득 대비 노인가구소득 비율	노인가구 소득구성			
		공적이전소득 ①	근로/사업소득 ②	재산소득 ③	합계(=①+②+③)
호주	70.6	55.6	26.2	18.2	100
오스트리아	93.4	81.8	12.4	5.8	100
벨기에	80.3	84.1	9.4	6.5	100
캐나다	91.1	35.1	24.8	40.1	100
체코	78.1	78.5	19.6	2.0	100
덴마크	79.5	62.9	16.7	20.4	100
핀란드	85.7	80.8	10.0	9.2	100
프랑스	103.4	77.3	5.5	17.2	100
독일	88.5	74.1	15.2	10.6	100
일본	89.8	51.3	38.7	10.0	100
<b>한국</b>	<b>68.8</b>	<b>30.2</b>	<b>50.8</b>	<b>19.1</b>	<b>100</b>
멕시코	89.1	31.4	56.8	11.8	100
미국	94.5	50.9	35.2	13.9	100
<b>OECD 평균</b>	<b>87.6</b>	<b>66.3</b>	<b>23.6</b>	<b>10.1</b>	<b>100</b>

주: · 공적이전소득에는 공적연금, 공공부조, 강제가입 퇴직연금이 포함됨

· 재산소득에는 사적연금과 그 외 금융소득이 포함됨

자료: Pensions at a Glance 2017(OECD)

-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 노인비중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가구의 빈곤을 해소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후의 일자리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의 확대와 양육에 대한 크레딧제도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또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정책도 고민해봐야 할 것임 **kiri**

9) 참고로 우리나라 노인가구지출은 전체가구지출의 60%임(통계청(2018. 5. 30),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